환율불안·추경지연 등 변수 산적… 금리인하 전망 엇갈려

韓 정책기조 '안갯속'

한은, 내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시장, 환율안정 무게… 5월 관측
늦은 추경에 이달 인하 목소리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오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이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널뛰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본 뒤 다음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제출하면 국회를 통과해도 빨라야 5월 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만큼 4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내린 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널뛰는 환율… 5월 금리인하설 무게

시장에서 5월 금리인하설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2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주부터 이날(7영업일)까지 원·달러 환율 등락폭은 55.50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등락폭(38.10원)보다 높다.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바로 시행될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면서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가 90일 유예조치로 상승한 것이다.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언제든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며 "향후 물가 압력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관세정책으로 수입 물가까지 오르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치도 반영되지 않았다.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만8000호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매거래량이 월 최대 5000호 증감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의 경우 매매 계약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지난달 한은의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떨어져 주택을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5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경 빨라야 5월 초…"이달 금리 내려야"

일각에선 이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수(소비+투자)부진에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둔화하면 경기악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1599억2000만달러로 1년 전(1633억달러)와 비교해 2.07% 줄었다. 분기별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였다가 ▲4분기 4.2%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1분기는 2.1%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유예된 관세 조치까지 본격화되면 기업 심리는 더 위축돼 수출 증가세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연되는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이달 금리인하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국회통과까지 시일이 걸려 빨라야 5월 초 편성될 수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기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며,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적은 규모이며, 산불 피해와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재균 KB증권 관계자는 "추경이 늦어져 대선 이후에 단행된다면 4월부터 시작된 보편관세에 대응한 재정정책이 부재할 수 있다"며 "5월 29일 금통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분기 자동차 수출 타격… 북미 10%대 감소

관세 리스크 확산

관세 발효 이전부터 산업 전반 영향
내달 부품관세 예상… 정부 대응 시급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1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 영향 등으로 자동차 수출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역(逆)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자동차 최대 수출 지역인 북미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한데 이어, 4월 3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에 25% 관세가 발효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자동차 생산량(+1.5%), 내수 판매량(+2.4%), 수출액(+1.2%)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3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4000만달러로 역대 3월 수출실적 중 2위 실적이다. 다만, 수출량 기준으로는 2.4% 감소했다.

범위를 넓혀 올해 1분기(1~3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7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수출량 기준으로는 2.2% 줄었다.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3월 북미 수출은 32억7000만달러로 8.4% 감소했다. 북미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미 수출액은 1분기 기준 1년 전보다 11.2% 감소한 77억7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캐즘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체별 3월 수출은 현대차가 10만1669대로 1.2% 감소했고, 기아는 9만633대로 2.9% 늘었다. 중형 3사 중에서는 KG모빌리티(6095대) 수출이 1.2% 증가했으나, 한국GM(3만9845대, -10.0%↓)과 르노코리아(2140대, 58.0%↓) 수출은 감소했다.

친환경차 3월 수출은 6만8760대로 5.8%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757대로 25.0%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5.3% 증가한 4만1969대로 친환경차 성장세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56.6% 증가한 6033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며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꺾이는데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4월 3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 부과에 이어, 5월 3일 이전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세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한 만큼,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민주당,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 제시

권칠승 의원 "AI 진흥정책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 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 및 기술 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면 원격진료 및 디지털 헬스 케어 등 관련 산업 발전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에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AI 서비스 확산을 통한 'AI 변호사' 'AI 홈닥터' 합법화 등을 제시했다.

벤처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 인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율·도전·유연성과 보상을 쟁취하는 벤처 정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자료를 강제로 요구·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이는 기술 탈취 및 증거 은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술 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외부자금 출자 비중 기준을 펀드 전체 합산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제도를 손질해 유보자금을 모험자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도 AI를 강조하는데 교감이 있었던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당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이 전 대표는 법률가라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법정시간 준수하는 틀을 깨지 않고 유연하게 하자고 제안할 것이기에 크게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